제4장

경제 · 통상 외교

제1절 FTA 확대
제2절 에너지 · 자원 및 환경 외교
제3절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제4절 WTO 및 OECD 관련 활동
제5절 통상투자진흥 외교

제1절 FTA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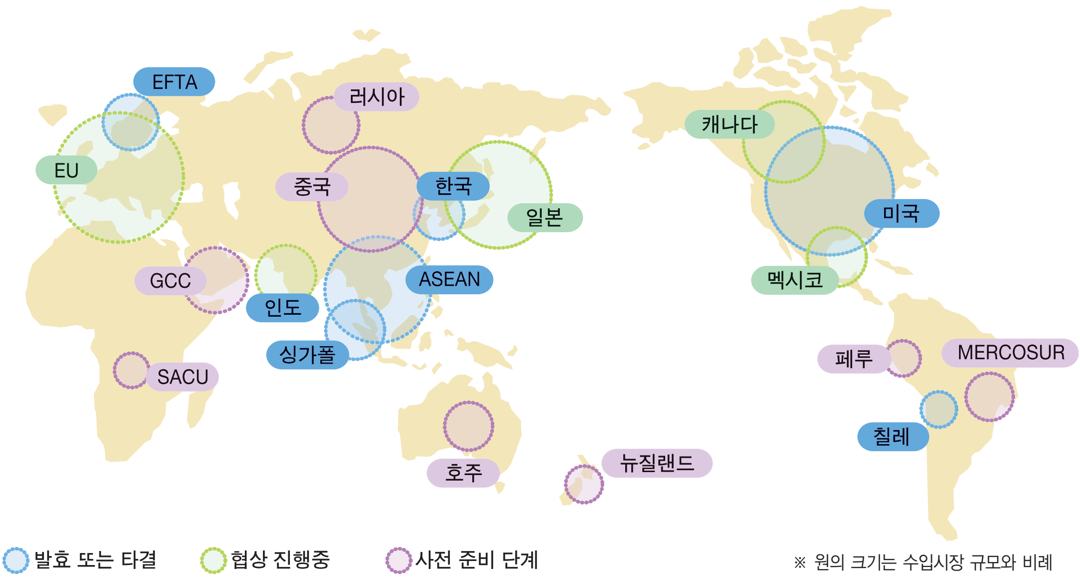
1. 개관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다변화 전략 등 선진통상 국가를 향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전 세계적인 개방 추세 및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FTA를 적극 추진하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 서비스) 등 총 15개국과 FTA를 타결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왔다.

2007년에는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과 FTA를 타결(4.2)하였고, EU와 협상을 개시(5.6)했으며 그 밖에도 캐나다, 멕시코, 인도, ASEAN(투자) 등 총 41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호주, 뉴질랜드, 페루, 러시아 등과의 FTA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걸프협력회의(GCC)와는 2008년 7월경 제1차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터키,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이집트, 이스라엘 등 유망 거점 FTA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특혜 관세 교역을 우리 수출액의 7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의 Global FTA Network(2007)



2. FTA 협상 타결 및 이행

1) 한·칠레 FTA의 이행

2004년 4월 1일 발효한 한·칠레 FT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07년 12월까지 자유무역위원회(FTC: Free Trade Commission)를 총 4차례 개최하였고, 협정 부문별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FTC 산하위원회를 총 14차례 개최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자유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상품무역, 위생검역, 전기통신표준 및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5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4~25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4차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Harmonized System) 상품분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양국 FTA 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11월 6~7일간 서울에서 제4차 자유무역위원회(FTC)를 개최하여, 각종 산하위원회를 통해 진전된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한편, 양국간 FTA 발효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2) 한·싱가포르 FTA의 이행

한·싱가포르 양국은 FT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2007년 7월 9~10일간 제1차 임시관세위원회를 개최, 협정문 양허표 및 원산지 규정상 '2002 HS 코드'를 '2007 HS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교환각서를 통하여 법적으로 확정하였다.

한·싱가포르 FTA가 2006년 3월 발효한 이후 2008년 1월까지 2년간 양국 교역액은 48.2% 증가하고, 우리의 대싱가포르 수출도 61.7%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 기간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은 29.8% 증가하는 데 그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는 86.9억불로 150.5% 증가하였다. 당초 무관세국가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의 관세 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오히려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보다 월등히 커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도 2005년 4.3%, 2006년 4.4%에서 2007년 4.9%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확대는 우리 제품의 국제인지도 제고와 비관세장벽 개선 등 FTA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양국간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를 최초로 포함한 FTA 협정으로서,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EFTA, 한·ASEAN,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의 선례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3) 한·EFTA FTA의 이행

서유럽 강소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하였다.

발효 이후 교역액이 13.1% 증가하는[51] 등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대EFTA 수출규모는 35% 줄어들었으나,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수출 증감률 변동이 심한 선박, 금(금괴), 그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오히려 6.9% 증가하였다. 대EFTA 수입은 53.7%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전동축, 편직물, 기타 섬유제품 등 일부 관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노르웨이산 선박용 부품을 수입하여 특수 선박을 제조한 후 노르웨이로 무관세 수출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무관세로 재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는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4)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비준 절차 진행

(1) 한·미 FTA 협상 타결

한·미 양국은 2005년 중 3차례의 실무점검회의와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FTA 추진 필요성 검토 및 이에 따른 공감대 확대 과정을 거쳐 2006년 2월 3일 FTA 협상을 공식 출범하였다.

한·미 양국은 상품, 농산물,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19개 분야를 협상 분야로 정하고,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말 고위급 협상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몇 번의 어려운 고비도 있었으나, 양국은 협상 타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51) 발효 전 32.6억불에서 발효 후 36.8억불로 증가하였다.

바탕으로 마침내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미 FTA 협상 타결(2007.4.2, 서울)

미 의회와 행정부는 FTA로 인해 노동·환경 기준이 약화되는 것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여 2007년 5월 노동·환경 분야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통상정책'에 합의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FTA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등 4개국에 각각 추가 협의를 제안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측의 추가 협의 제안이 기타결된 협상 내용의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 협의 결과를 반영한 협정문에 최종 합의하였고,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2) 발효를 위한 절차 진행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비준·발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7년 9월 3일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9월 7일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미 FTA 조기 발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원만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할 뜻을 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한·미 FTA 비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12월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인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에서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월 15일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미 행정부 역시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07년 9월 「한·미 FTA가 미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 심의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서명 순서에 따라 미·콜롬비아 FTA를 우선 처리한

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 · 콜롬비아 FTA의 비준 추이가 한 · 미 FTA 비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협상 결과 및 평가

상당한 준비 기간과 1년여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타결된 한 · 미 FTA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수입액 기준으로 9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서비스 ·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개방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는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등) 개방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 등에 있어서도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 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의 대미 수출을 증대시키는 등 한 · 미 경제 관계를 크게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효율성도 증대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 미 FTA가 발효될 경우 대미 수출은 연평균 25.5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간 실질 GDP는 6.0%(약 80조원)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대미 흑자 46억불, 대세계 흑자 200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진행 중인 FTA 협상

1) 한 · EU FTA 협상 출범 및 진행

세계 제1위 경제권,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투자국인 EU와의 FTA 협상은 2007년 5월 6일 만델슨(Peter Mandelson) EU통상담당집행위원이 방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 · 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2007.5.7~11)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까지 총 5차례 협상이 개최되었고, 그간의 협상 결과 핵심 쟁점인 상품관세양허, 자동차 표준, 원산지

(개성공단 포함) 등을 제외한 무역구제, 분쟁해결, 투명성, 지속가능발전, 경쟁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실상 완전히 합의된 문안이 도출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한·EU 양측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2008년 내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EU FTA 1차 협상(2007.5.7, 서울)

EU와의 FTA체결은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Hub)'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U(4.2%)는 미국(3.7%)보다 평균관세율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은 국내 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 혜택이 발생하고 우리의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미 FTA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의 GDP 증가가 예상되며, 한·미 FTA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52)]

2) 한·ASEAN FTA 타결(상품, 서비스) 및 투자 협상 진행

2007년 6월 1일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이행을 개시한 ASEAN 국가들로 수출되는 상품 전체의 45%가 협정 발효 즉시 0~5%의 저율 관세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전체의 63%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07년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이행을 개시하였다.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당시 국내정치 문제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태국과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자 상품협상 끝에, 2007년 12월 18일 상품협정

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가입을 위한 양허 협상을 타결하였다.

인구 5억의 잠재 수요와 평균 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신흥시장인 ASEAN은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회원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ASEAN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우리의 대 ASEAN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연간 42억불, 대ASEAN 무역흑자는 15억불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무역협정 협상에 이어 순차적으로 협상이 시작된 서비스 협정 또한 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ASEAN 정상회의 계기에 서명되었다. 이로써 서비스 개방 수준이 낮던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이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에서 WTO 양허 수준을 월등히 상회하여 개방하였다.

한편, 투자협정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 협정에 이어 2008년 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3) 한·캐나다 FTA 협상

2005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까지 모두 14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상품, 원산지, 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노동 등 분과별로 양허표 및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지난 2년여간의 협상 결과 양측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향후 협상 타결의 관건인 소수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동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토대로 교역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민감 품목을 충분히 고려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 한 · 인도 CEPA 협상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은 2006년 3월 개시된 이후 2007년 12월까지 총 9차례 진행되었다. 2007년 말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인도 CEPA 협상이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인도측이 어려움을 표명함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제조업 기반 취약 등 인도의 현실적 한계와 가능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2008년 말까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 중 최초로 FTA 협상을 시작한 인도는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대 신흥시장인 동시에, 서남아 지역의 경제 허브로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양국간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CEP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불의 무역 수지 개선과 1조 3천억원의 GDP 증가가 예상된다.[53)]

5) 한 · 멕시코 FTA 협상 재개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 개최된 이후 상품 양허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로 인해 그간 중단되었던 한 · 멕시코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이 2007년 8월 8일 양국 합의하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명칭을 바꾸어 공식 재개되었다.

금번 재개된 협상은 과거 양국간 SECA 협상과 달리, 자유화 수준 및 포괄 범위가 보다 확대 ·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 · 멕시코 양국은 2007년 12월 5~7일간 제1차 한 · 멕시코 FTA 협상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였다. 한 · 멕시코 FTA 체결은 우리 기업의 북중미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결과 GDP 0.03% 증가(단기), 0.55% 증가(장기), 수출은 6.8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54)] 또한, 한 · 멕시코 FTA 체결은 양국 경제적 혜택의 확대뿐 아니라 양자간 정치 · 전략적 파트너십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4.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FTA 여건 조성

1) 한 · 중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07년 3월부터 총 4차례 진행되었다. 제1차 회의(3월, 베이징)에서는 산관학 공동연구의 위임사항(TOR: Terms of Reference), 보고서 목차 등을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7월, 서울)에서는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 상품 분야 관련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3차 회의(10월, 웨이하이)에서는 서비스,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8년 개최된 제4차 회의(2월, 제주)에서는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과의 FTA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큰 반면, 양국간 유사한 농산물 작목 및 소비구조,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우리 농산물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한 · 중 FTA의 협상 개시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와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내 각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 한 · GCC FTA 사전협의회 개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다. GCC는 2006년 기준 우리의 제5위 교역상대국으로, 수출은 77.8억불(제8위 수출국), 수입은 540.7억불(제1위 수입국)에 달하며 수입액 중 원유 및 석유제품이 98%로 527.4억불에 달하고 있다.[55)]

한국과 GCC는 2007년 3월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이후, 한·GCC FTA 추진 필요성을 양측 모두 공감함에 따라 2007년 11월 양측 실무자간 FTA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2008년 1월 22일 한·GCC FTA 공청회 및 2008년 1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한·GCC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은 2.6억불(4.9%), 수입은 7.0억불(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56)]

55)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7%, LNG 수입의 48%를 GCC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한 · GCC FTA 공청회(2008.1.22, 서울)

3) 한 · 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 협상 출범 검토

우리나라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이자 인구 2억 2천만명의 거대 신흥시장인 MERCOSUR와 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방문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상과 한 · 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4차례에 걸친 정부간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06년 12월 완료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6차 한 · MERCOSUR 정책협의회에서, 한 · 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한 · MERCOSUR 경제의 상호 보완성에 입각하여 FTA가 체결되면 GDP 증가율이 한국은 0.17~2%, MERCOSUR는 0.02~2.74%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 의약품 및 섬유, MERCOSUR는 쇠고기, 오렌지쥬스, 대두 등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번 공동연구 보고서 공식 완료는 FTA 협상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정부는 향후 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국내 업계, 학계 등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 · MERCOSUR FTA 협상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4)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진행

1999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가 출범된 것을 계기로 한·중·일 FTA 추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3국의 연구기관들은 '무역

원활화 방안' 및 '직접투자 확대방안' 관련 제1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부는 동북아 시대 구상에 기초하여 동 공동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2002년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제2기 연구의 첫 번째 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하였다. 연구수행기관으로는 한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에서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그리고 일본에서 종합연구개발기구(NIRA)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민간 연구기관 주도로 시작한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업계 대표도 참여하였으며, 2007년부터 3국의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여하는 등 연구의 참여폭이 확대되었다.

민간공동연구는 워크숍(매년 2회)과 심포지엄(매년 1회) 개최를 통해 보고서를 확정하고, 연구 결과를 연례 ASEAN+3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해 오고 있는데, 2007년에는 「한·중·일 FTA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민간공동연구를 정부 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3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5) 한·호주, 한·뉴질랜드 민간공동연구 진행

호주, 뉴질랜드와는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호주 ITS Global 및 뉴질랜드의 뉴질랜드경제연구소(NZIER)는 2007년에 각각 3차례 회의를 거쳐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GDP 증가율은 0.1% 미만이며, 우리측 수입이 수출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57]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와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이 농축산물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민간공동연구 결과, 농축산업 등 국내 민감 분야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FTA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57) 양국 민간공동연구 결과(2007)

제2절 에너지 · 자원 및 환경 외교

1. 에너지 · 자원 확보 노력

세계 제4위의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제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에게 에너지 ·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고유가 현상,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자원 민족주의 대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7년에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노력, 에너지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 범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에너지 · 자원 외교를 추진하였다.

1)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추진

(1) 중동 지역 정상외교 추진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하여 자원 정상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과의 자원협력 강화와 세계 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협의하였고, 전략적 에너지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 협력기반 조성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한 · 러시아간 에너지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3차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2007.4, 블라고베쉔스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극동시베리아에서의 한 · 러 에너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제2차 러시아 극동경제 포럼(2007.9, 하바롭스크)에도 참석하여 러시아 에너지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중앙아, 중남미, 아시아 자원외교 강화

2007년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중앙아,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원외교 강화 차원에서, 방글라데시(1월), 투르크메니스탄(5월), 베트남(5~6월), 몽골(6월, 11월), 우크라이나(6월), 베네수엘라 · 에콰도르(8월) 등의 국가에 민관 자원사절단을 파견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협의 및 추진하였다.

또한, 미얀마(2월), 아제르바이잔(4월), 몽골(5월), 우즈베키스탄(11월), 칠레(11월),

호주(11월), 페루(11월), 브라질(12월), 러시아(12월) 등의 자원부국과의 정부간 협의 채널 구축 · 운영을 통한 정기적인 에너지협의를 전개하였다.

(4) 새로운 협력지역 발굴 및 개척

또한 향후 에너지 협력의 잠재성이 높은 새로운 지역을 발굴 및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이라크와는 이라크 쿠르드지역 '민관 자원협력사절단' 방문(1월) 및 동 계기의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 천연자원부간 유전개발협력 MOU 체결, 한 · 이라크 에너지 관련 장관급회의(4월), 한 · 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 개최(9월), 한국석유공사 중심의 한국 컨소시엄(consortium)과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간 바지안(Bazian) 광구 개발계약(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 서명(11월)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에너지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2) 에너지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 정부는 2007년 5월 한 · 남아공 에너지자원협력협정에 가서명하였다. 동 협정이 체결되면 아프리카 자원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한 · 남아공 에너지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아공 내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의 남아공 원전시장 진출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간 협력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 남아공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화석연료를 이용한 청정 발전기술의 상용가능성을 실증하는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FutureGen 프로젝트[58] 협력을 위해 참여국간 협정문안 교섭에 3차례 참여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한 · CERN 협정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세계 최대 고에너지 물리연구소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 재정적 운영의 틀이 마련되었다.

58) FutureGen 프로젝트란 석탄을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 · 저장하는 275MW급 화력발전소를 미국 내에 건설 ·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청정 발전기술의 상용가능성을 실증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3)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에너지협력체계 구축 전개

(1) 동북아 에너지 안보체계 구축 참여

동북아 지역 내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해, 2007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은 에너지 안보 대화의 증진에 합의하였으며, 2007년 6월 한 · 중 · 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도 3국간 에너지 안보 대화의 강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 · 중 · 일 3국간 고위급 에너지협의체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회의방식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중국, 일본측과 논의하였다.

(2) 범아시아에너지시스템(TAES) 구축 참여

범아시아에너지시스템(TAES: Trans-Asian Energy System)이란 범아시아 지역의 국가간 에너지협력을 위한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안정적 에너지 자원확보와 역내 국가와의 장기적인 에너지협력을 도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2007년 8월,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공동으로 TAES 구축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공급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수요국간 경쟁적 수요하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문제 해결의 장이 마련되었다.

(3) 기타 국제사회의 에너지 안보 논의 참여

이 밖에도 국제사회의 에너지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주요 에너지소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사회 및 글로벌 장기협력상설그룹 회의 등에 참석하여 세계 에너지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IEA 비회원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 방안을 공동모색하였다. 또한 ASEAN+3, APEC, EAS, ASEM 등에서의 에너지 안보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4) 효과적인 자원외교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007년에는 광물자원 개발 및 평가 분야에 대해 총 5개국 14명[59] 의 자원부국 에너지전문가를 초청하여 KOICA 주관하에 기술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부국들과의

59) 미얀마(2명), 방글라데시(4명), 아제르(3명), 타지키스탄(1명), 콩고(4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에너지 거점공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에너지관련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정보 네트워킹 강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가에너지위원회, 고유가 범정부 대책회의 참석(10월), 에너지환경연구회(정책연구모임) 세미나 개최(3회),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원자력협력 선진화 워크숍' 개최(8월) 등을 통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에너지업무 공조체계를 강화하였다.

5) 대체에너지 협력 강화

국제 바이오에너지 세미나 개최(2007.9),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사업 참여, 독일과의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및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설립 참여를 논의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 추진하였다.

2. 발리 로드맵 채택 및 환경협력

1) 발리기후변화회의 참여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 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공헌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IPCC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유례없이 고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12월 3~15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겸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발리회의)가 개최되었다.

발리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 협상(Post-2012 협상)의 로드맵(roadmap)인 「발리 로드맵」[60] 이 채택되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Post-2012 협상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교토의정서하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Post-2012 체제 형성을

60) 발리회의시 채택된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으로, 선진국 추가감축 특별작업반 4차 회의 결과 등 26개 결정문을 총칭한다.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61)

기후변화회의(2007.12.12, 인도네시아 발리)

우선 발리회의에서 출범키로 합의된 '기후변화협약하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은 2008년 중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범지구적 장기 감축목표, 선진국 및 개도국의 감축문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우선순위 평가, 친환경 기술이전 및 확산, 대개도국 신규재원 제공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선진국의 추가 감축공약에 대해서는 제4차 IPCC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5~40% 감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적실성에 대한 2차 점검의 경우, 교토의정서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추가적인 개도국 적응 지원 재원확보 방안, 교토의정서 의무참여국으로의 편입 절차, 청정개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지리적 불균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발리회의에서는 개도국의 Post-2012 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조속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립 합의, 기술 이전, 산림분야 지원 등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2) 환경협력 강화

(1)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성장, 국가들간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61) 발리 로드맵의 가장 큰 성과로서 기존 교토의정서하에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던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 문제를 협상 의제화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에 상응(comparability)하는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국내 감축 공약 또는 행동(정량적인 감축목표 포함)"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개도국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개도국이 "기술, 재정 및 능력 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 감축 행동"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어느 지역보다도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6월 제12차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황사 대응협력은 물론 황해 환경보호를 위한 발해만-시화호 오염해역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일본과도 같은 해 7월 제10차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쓰레기 대책,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레짐 형성에 협력키로 하였다. 또한 양국들간의 환경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신규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11월에는 3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러시아와의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개하여 양국간 환경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의 풍부한 자연자원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합의하였다.

2007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는 3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제8차 3국 환경장관회의(2006.12)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한·중·일 3국 황사공동연구단의 발족(2007.9)은 향후 동북아 황사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8월 한 · 중 · 몽골 3국간 황사 대응을 위한 조림사업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한 동북아산림네트워크의 발족은 황사공동연구단과 함께 동북아 황사대응의 기본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또한, 한·중·일·러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은 해양쓰레기 감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 부산에서 해양쓰레기 워크숍과 국제연안 정화행사를 주관하였다. 동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12차 정부간회의에서는 4개 지역활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향후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 통합적 해양 및 하구관리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의 공조체계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흡착포 55톤을 구입하고 일본으로부터는 10톤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NEASPEC 회원국들에게 회람하는 등 동북아 환경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북한의 취약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2007년 11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북한환경개선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설립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상기와 같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로 산재된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해양 분야,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응을 위해 약 160여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들이 UN,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CITES협약,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Ramsar)협약, 사막화방지협약, 해양 분야에서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런던협약,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MARPOL협약, 해양유류오염 대응을 위한 OPRC협약,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사전승인통보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약 50여개의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전 지구적 환경 문제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0월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 당사국총회는 약 140여 개의 회원국과 환경관련 국제기구, NGO 등 약 2,000여명의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환경 회의로서, 그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일류 환경 국가로서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7년 10월에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2008.1 발효)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국제적 대응을 위한 기존의 OPRC협약을 강화한 위험 · 유해 물질의 해양 유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OPRC-HNS 의정서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2007년 12월에 가입(2008.4 발효 예정)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 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지속가능 개발위원회(UNCSD),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지구환경기금(GE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범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제3절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1. 한 · 미 관계

한 · 미간 경제 교류는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7년 한 · 미 교역규모는 830억불에 달했다. 미국은 중국, EU에 이어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미국의 제7위 교역상대국이다.

2007년 한 · 미 통상관계

	한 국	미 국
수출액	457.7억불	372.2억불
주요 수출 품목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에너지, 철강제품 등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
투자액	43.8억불	23.4억불
투자 누계액	254억불(1968~2007)	390억불(1962~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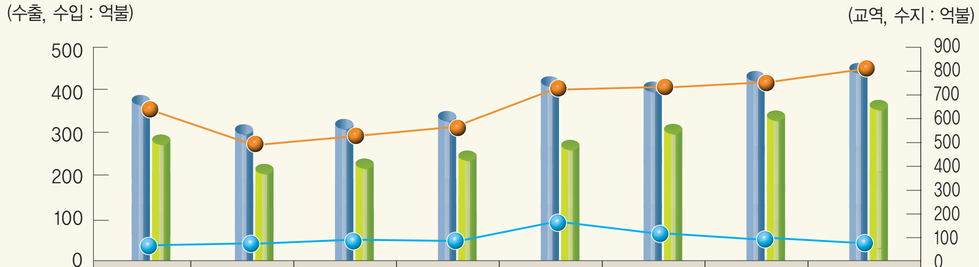
(출처 :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200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458억불로 전체 수출의 12.3%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에너지, 철강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약 372억불로 전체 수출의 약 3%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의 제6대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2007년 기준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액은 35.2억불 상당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투자대상국(누계기준)으로서 1968~2007년간 대미 투자 누계액은 254억불(신고기준)로 우리나라 총 해외 투자액(1,370억불)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외국인투자국으로서[62] 1962~2007년간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390억불(신고기준)에 달한다.

62) 단일국 기준으로 제1위, EU(448억불) 포함시 제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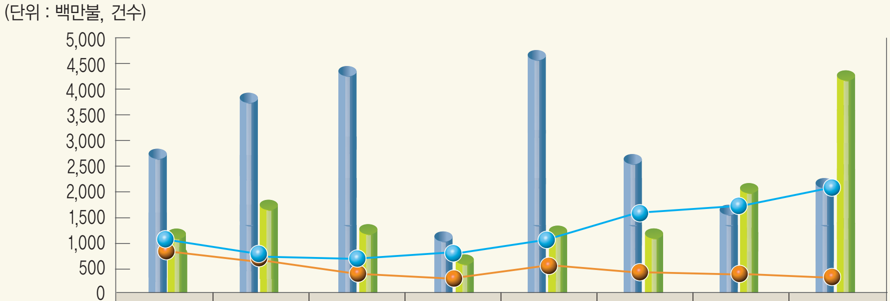
한·미 교역 동향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미수출	376.1	312.1	327.8	342.2	428.5	413.4	431.8	457.7
대미수입	292.4	223.8	230.1	248.1	287.8	305.9	336.5	372.2
대미무역	668.5	535.9	557.9	590.3	716.3	719.3	768.4	829.9
무역수지	83.7	88.4	97.7	94.1	140.7	107.6	95.3	85.5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미 투자 동향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한투자금액	2,921	3,882	4,491	1,242	4,718	2,690	1,705	2,340
대한투자건수	803	659	495	453	553	496	497	474
대미투자금액	1,329	1,870	1,409	781	1,473	1,419	2,196	4,377
대미투자건수	1,213	968	873	990	1,307	1,770	1,895	2,13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한 · 미 교역 및 투자는 절대액 기준으로는 전반적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의 급속한 교역 확대 및 미국 내 한국 상품 점유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63]를 보이고 있다.

한 · 미간 경제의존도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위의 GDP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64]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2007년 기준 2조 3,369억불에 달하는[65] 거대시장인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우리의 입지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는 목표하에 미국과의 FTA 협상을 2006년 2월 3일 개시하여, 2007년 6월 30일 최종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한 · 미 FTA 협상과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양국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된 이래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오던 미국산 쇠고기가 2006년 1월부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 재개가 허용되었으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 등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2007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되었다. 한편, 2007년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미국은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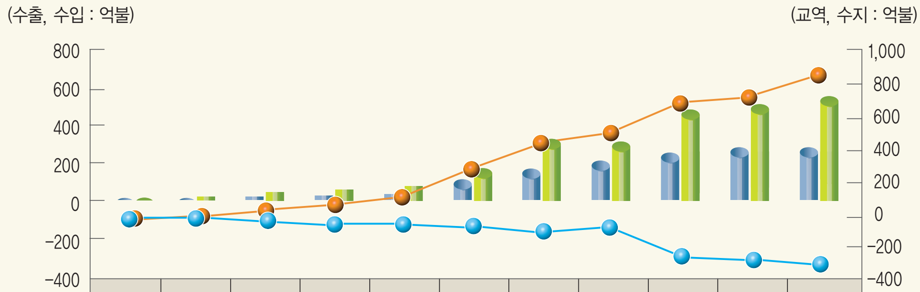
2. 한 · 일 관계

한 · 일 양국간 경제 · 통상 관계는 수교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어 왔으며, 투자, 사회보장, 세관 분야 등 각종 분야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1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국간 교역액은 2007년 826.2억불로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달성하는 등 확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도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63) 전체수출(수입) 중 대미수출(수입) 비중은 2000년 21.8%(17.3%)였으나 지속 하락하여 2007년도에는 12.3%(10.4%)를 기록하였다.
64)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2007)
65) 미 상무부(Bureau of the Census)

그러나 한·일 양국간 교역에 있어 우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였으며, 2007년에는 무역적자규모가 300억불에 육박하였다.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국내 관련 정책 및 인프라를 조성하고,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인 한·일간 부품·소재 분야 협력 증진 및 일본의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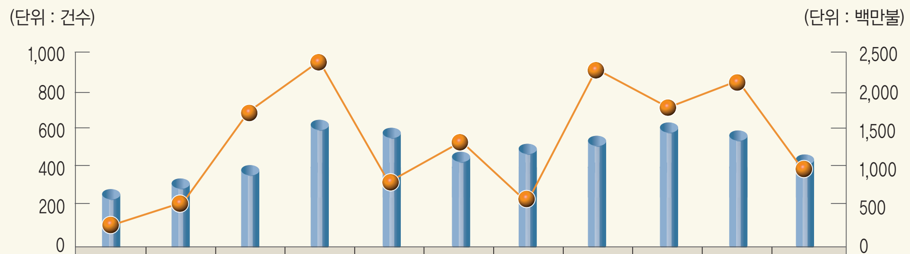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	0.4	2	13	30	45	126	170	205	240	265	264
수입	2	8	24	59	76	186	326	318	484	519	563
교역	2	10	37	89	121	312	497	523	724	785	826
수지	-1	-6	-11	-28	-30	-59	-156	-114	-244	-254	-299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대한 투자는 1999~200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4.5억불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도 일본의 대한 투자는 9.9억불을 기록하였고 누계기준 일본은 제2위의 대한 투자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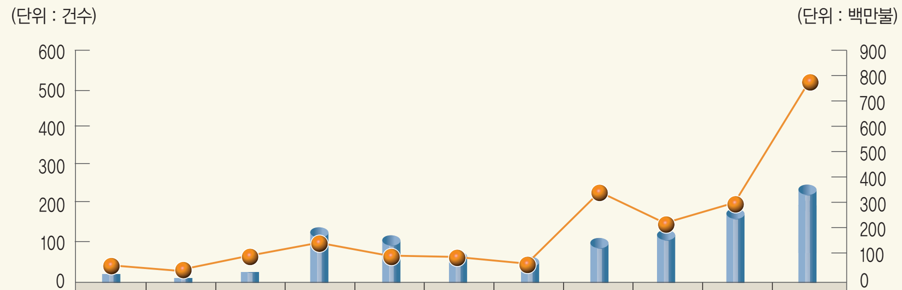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일본의 대한국 투자 동향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248	330	392	615	592	474	502	557	612	583	469
금액	266	510	1,762	2,451	776	1,404	543	2,263	1,881	2,108	990

(출처 : 산업자원부)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본 투자 동향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24	19	37	131	117	80	62	108	134	178	226
금액	54	24	91	142	95	97	52	320	213	289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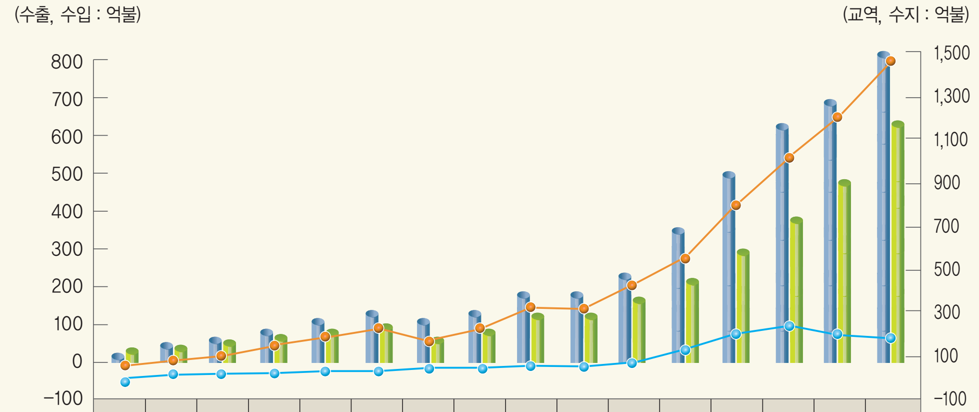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양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일 경제·통상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2003년 12월 중단되었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2006년 12월 도쿄에서 재개하였고, 2007년 7월에는 서울에서 제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3. 한 · 중 관계

1992년 한 · 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2004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만큼 정치, 외교,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경제 · 통상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한 · 중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2~2007년간 연평균 25% 수준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수교 당시의 64억불에서 2007년 1,450억불로 약 22.8배나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2004년부터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우리는 2004년에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92년 한 · 중 수교 이후 한 · 중 교역 동향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중수출	27	52	62	91	114	136	119	137	185	182	238	351	498	619	695	820
대중수입	37	39	55	74	85	101	65	89	128	133	174	219	296	386	486	630
대중무역	64	91	117	165	199	237	184	226	313	315	412	570	793	1,005	1,180	1,450
무역수지	-10.7	12.22	7.40	17.43	28.38	34.55	54.60	48.18	56.56	48.87	63.54	132.0	201.9	233.0	209.0	189.6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 · 중 교역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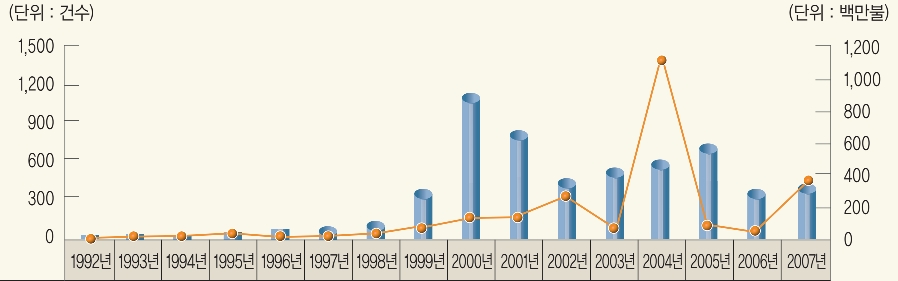
	1992년	2007년	증가량(배)
수출	27(164.6)	820	▲30.3
수입	37(8.3)	630	▲17
수지	-10.7	190	-
총액	64	1,450	▲22.8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5년 11월 양국 정상은 양국간 무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불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2012년까지 무역 목표액 2,0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무역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233억불, 2006년 209억불, 2007년 190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양국은 무역 확대의 기조하에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에 구매사절단, 서부 대개발 조사단 파견 사업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양국간 투자에서도 중국은 2002년 이후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의 대중국 투자 누계 규모는 2007년 말 신고기준 약 18,042건, 334.4억불에 달하였다. 인적 교류에서도 2005년 425만명, 2006년에는 482만명, 2007년에 585만명에 이르렀으며, 양국간 항공 운항편수는 주간 830편을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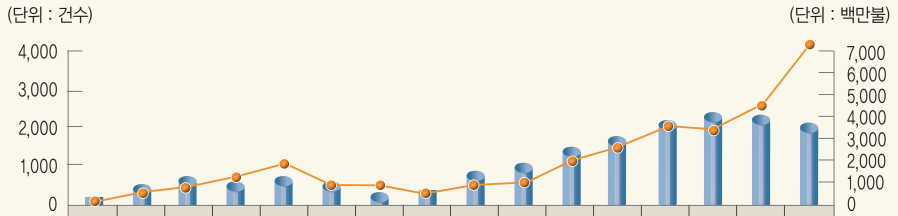
1992년 한 · 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6	29	33	51	63	76	97	323	1,165	810	442	522	596	672	334	365
금액	1	7	6	11	6	7	8	27	76	70	249	50	1,165	68	40	385

(출처 : 산업자원부)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동향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227	513	838	622	701	610	238	465	808	1,044	1,403	1,704	2,120	2,288	2,243	2,073
금액	223	631	827	1,282	1,931	916	909	494	1,005	1,020	2,111	2,865	3,717	3,641	4,535	7,181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나아가, 한·중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05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경제·통상 관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양국간 통상 현안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양국은 정상회담, 통상장관회담, 경제장관회의, 산업협력위원회, 투자협력위원회 등의 장관급 협의채널과 경제공동위, 무역실무회담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식품 위생 안전 및 검사검역,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통상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 1월 양국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협의체 및 산하 조기경보체제'를 발족하여 2007년 3월 제2차 회의 개최 등 매년 정례 채널로 운영함으로써 식품 관련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 및 고위인사 상호 방문, 실무진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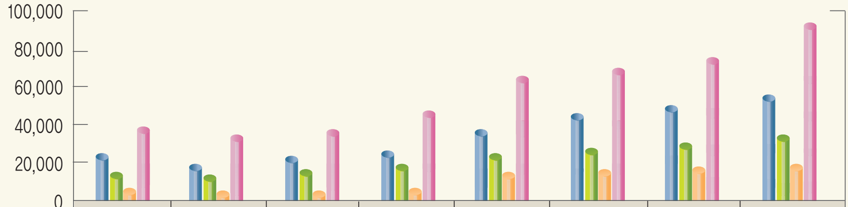
4. 한 · EU 관계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구 4억 9천만명(2006년 기준)의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 · 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 · EU 통상관계도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측간 교역규모는 2001년 이래 2007년까지 연평균 18% 수준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또한 2001년 당시 47억불에서 2007년 191억불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EU는 2006년부터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EU와의 교역이 우리 전체 교역의 약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제4위 수입시장이 되었다. 한편, 우리는 2007년 11월 기준으로 EU의 교역 상대국 중 역내 국가를 제외하면 제6위 수입국 및 제9위 수출 대상국이다.

한 · EU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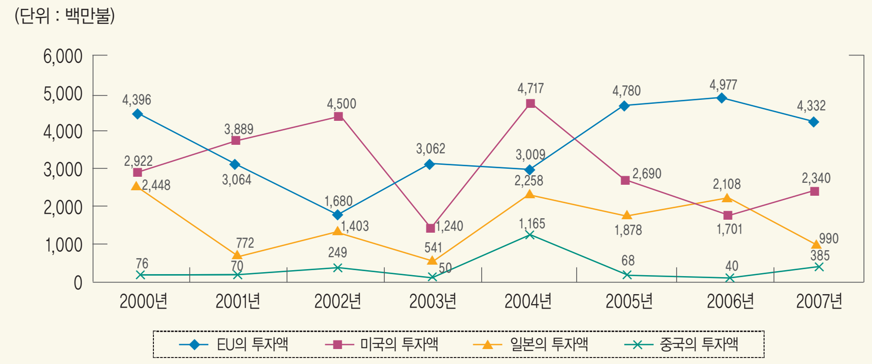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	23,424	19,627	21,694	24,887	37,830	43,660	48,450	55,982
수입	15,788	14,920	17,107	19,380	24,187	27,259	30,110	36,824
무역수지	7,636	4,707	4,587	5,507	13,643	16,365	18,340	19,158
총교역량	39,212	34,547	38,801	44,267	62,017	70,955	78,560	92,806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 · EU간 투자에서도 EU는 누계 투자액 기준으로 세계 제1위의 대한 투자국으로서 2007년에 약 43억불, 전체 누계 투자액은 448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EU 누계 투자규모는 약 166억불에 이르고 있다.

주요국의 대한 투자 동향



(출처 : 산업자원부)

양측간 경제 · 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 에 따라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2006년 한 · EU 양측은 2차례의 FTA 예비협의를 거쳐, 2007년 5월 한 · EU FTA 협상이 개시되어 2007년 중 총 5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편, 제6차 한 · EU 공동위가 2007년 6월 1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한 · EU간 경제동향 및 정책, 경제 · 과학기술 ·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및 양자간 통상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EU 회원국과도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하여 통상 현안 및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2007년 중 여러 성과가 도출되었다. 2007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 · 프랑스 항공회담에서 지난 10여년간 한 · 프랑스간 주요 외교 현안이었던 서울-파리 복수취항 및 운항횟수 증대 등에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방문시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안이 서명되고 IT, 중소기업, 산업기술, 항공우주 등 다수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외에도 2007년 6월 한 · 프랑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었고, 2007년 10월에는 한 · 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서명되었다.

5.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적 대응

최근 WTO 다자간무역협상, FTA 등을 통한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증가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는 2000년 9월 '수입규제대책반' 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관련 문제를 정부간 양자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조치 당국과 교섭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활동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규제 조사개시 이전, 조사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측 대응논리를 구성

▶ 수입규제국과 정부간 양자협의
-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간 양자협의를 갖고 우리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요청

▶ 서한 및 정부 입장서 전달
-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회의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

주요국의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단위 : 건수, 2007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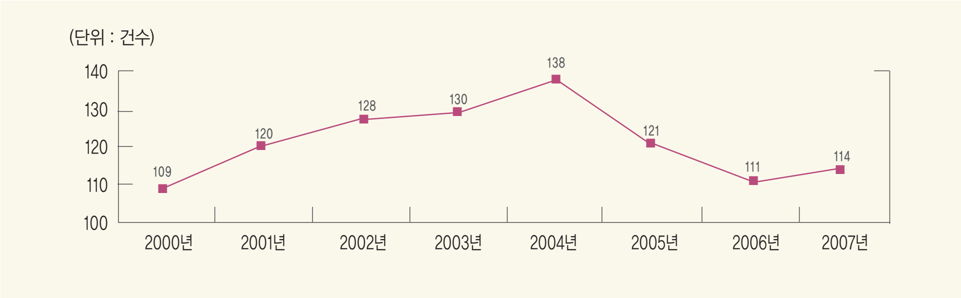
순 위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1	인도	21(6)	0	0	1	22(6)
2	중국	21(1)	0	0	0	21(1)
3	미국	12(1)	1	4	0	17(1)
4	호주	6	0	0	0	6
4	터키	6	0	0	0	6
4	EU	5	1	0	0	6
7	남아공	4	0	0	1	5
8	말레이시아	4(1)	0	0	0	4(1)

※ 괄호 안의 수치는 현재 조사 중인 건수

2007년에는 인도, 중국, EU, 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 7차례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고 EU, 인도, 미국, 우크라이나 등에 우리 정부의 입장서를 전달하는 등 외국정부의 과도한 수입규제조치의 자제를 촉구하고 문제가 있는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최종 · 잠정 판정이 이루어졌거나 우리에게 조사결과가 사전 통보되어 온 총 43건의 수입규제조치 중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판정을 31건(72.1%) 도출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WTO 회원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 대비 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 의 평균비율이 35.7%(인도 : 39.9%, 중국 : 28.2%, 미국 : 40.6% 등)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7년 수입규제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쇄용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의 피해 무혐의 판정을 들 수 있다. 동 사례에서 정부는 통상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한 협의, 정부입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정부간 협상과 민간업체와의 긴밀한 협력대응을 통해 한국산 인쇄용지가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미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2007.11.21)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연도별 수입규제 건수 추이



또한 우리 정부는 EU의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종료 문제에 대해 수차례의 수입규제 대책반 활동, 통상장관회담 등 다양한 차원의 정부간 협의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EU는 상계관세를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급하여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의 중국산 삼성, LG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중국산 삼성, LG 냉장고는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통상 분쟁 대응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역 상대국들과 수많은 통상 분쟁을 치러왔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 분쟁에 대처하여 왔다.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에 따라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상대국으로부터 우리의 조치에 대해 제소당하는 경우에는 본 절차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개선 및 우리 정부의 무역제도가 WTO 규범에 기초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여해왔다.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 2007년 12월까지 우리나라는 제소 13건, 피소 11건 등 모두 24건의 분쟁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이 중 패널이 설치된 16건의 분쟁에서 12승 4패를 기록함으로써 승소율 75%를 달성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일 하이닉스 반도체(DRAMs) 상계관세 분쟁' 에 대한 패널 및 상소심에서 승소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하이닉스 DRAMs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하이닉스 DRAMs에 대한 EU의 중간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이닉스 DRAMs에 대한 상계관세를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급하여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산 하이닉스 DRAMs의 유럽 시장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이행 분쟁' 에서는 우리 무역위원회 관련 조치의 일부 절차적 흠결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반덤핑 마진 등 주요사항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 입장이 관철되었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절차적 흠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통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계기도 되었다.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현황표

분쟁명		분쟁 상대국	우리 나라	현 황	
■ 현재 진행 중인 분쟁					
DS336	일본 DRAM 상계관세	일본	제소	패널설치 : 2006.6.19	최종보고서 회람 : 2007.7.13 상소통보 : 2007.8.30 상소보고서 회람 : 2007.11.28
DS312	인도네시아 제지 이행 패널	인도네시아	피소	패널설치 : 2007.1.23	최종보고서 회람 : 2007.9.28
■ 패널/상소 단계에서 해결					
DS323	일본 김 수입쿼타	일본	제소(9)	• 잠정보고서 배포 직전 양자합의로 타결 : 2006.1.20 – 수입쿼타 5배 증량 • 패널설치 : 2005.3.21	사실상 승소
DS299	Hynix DRAM 상계관세	EU		• 패널보고서 채택 : 2005.8.3 – 패널설치 : 2004.1.23	부분 승소
DS296	Hynix DRAM 상계관세	미국		•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2005.7.20 – 패널설치 : 2004.1.23	상소심 패소 (패널 승소)
DS301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EU의 TDM 제도)	EU		• 패널보고서 채택 : 2005.6.20 – 패널설치 : 2004.3.19	승소
DS251	철강 세이프가드	미국		•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2003.12.10 – 패널설치 : 2002.6.14	승소
DS217 /234	Byrd 법안	미국		•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2003.1.27 (양허정지승인 : 2004.11) – 패널설치 : 2001.8.23	승소
DS202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미국		• 패널/상소 보고서 채택 : 2002.3.8 – 패널설치 : 2000.10.23	승소
DS179	스테인레스 반덤핑	미국		• 패널보고서 채택 : 2001.2.1 – 패널설치 : 1999.11.19	승소
DS99	DRAM 반덤핑	미국		• 패널보고서 채택 : 1999.3.19 – 패널설치 : 1998.1.16	승소
DS312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인도네시아	피소(6)	• 패널보고서 채택 : 2005.11.28 – 패널설치 : 2004.9.27	승소
DS273	한-EU 조선 보조금	EU		• 패널보고서 채택 : 2005.4.11 – 패널설치 : 2003.7.21	승소
DS163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미국		• 패널보고서 채택 : 2000.6.19 – 패널설치 : 1999.6.16	승소
DS161/ 169	쇠고기 수입규제	미국, 호주		•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2001.1.10 – 패널설치 : 1999.5.26 – 이행 종료 : 2001.9	패소

분쟁명		분쟁 상대국	우리 나라	현 황	
DS98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EU	피소(6)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2000.1.12 – 패널설치 : 1998.7.23 – 이행 종료 : 2000.5	패소
DS75/84	주세 분쟁	EU,미국		패널/상소보고서 채택 : 1999.2.17 – 패널설치 : 1997.10.16 – 이행 종료 : 2000.1	패소
■ 양자협의 단계에서 해결					
DS307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TDM 이외의 조치)	EU	제소(3)	협의요청 : 2004.2.13, 2004.7.23 양자협의 후 사실상 종결	
DS215	합성섬유 반덤핑	필리핀		협의요청 : 2000.12.15, 조치철회 : 2001.11	
DS89	칼라TV 반덤핑	미국		협의요청 : 1997.7.10, 조치철회 : 1998.8	
DS41	농산물 검사/검역	미국	피소(5)	협의요청 : 1996.5.24, 사실상 종결(1996년 이후)	
DS40	통신장비 조달제도	EU		협의요청 : 1996.5.9, 양자합의 : 1997.10	
DS20	먹는샘물 수입제도	캐나다		협의요청 : 1995.11.8, 양자합의 : 1996.4	
DS5	식품유통기한	미국		협의요청 : 1995.5.3, 양자합의 : 1995.7	
DS3	농산물 검사/검역	미국		협의요청 : 1995.4.4, 사실상 종결(1996년 이후)	

한편, 우리나라의 이익이 직접 침해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타국간의 통상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였다. 2007년도에는 브라질 재생타이어 분쟁(상소포함), 터키 쌀 수입제도 분쟁, EC 연어 반덤핑 분쟁, 미국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일몰재심[66] 이행 분쟁 등에서의 제3자 참여를 완료하였고, 현재 7건의 타국간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WTO 분쟁 해결절차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회원국들의 수입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여 우리의 통상이익 보호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66) WTO 반덤핑협정 제11조 3항에 따르면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검토'과정을 일몰재심(Sunset Review)이라 한다.

제4절 WTO 및 OECD 관련 활동

1.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1) DDA 협상 경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공식 출범한 이래,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세계무역질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DDA 협상은 3대 핵심 이슈인 농업 시장접근(Market Access), 농업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에 대해 미국, EC,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간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2006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2006년 7월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회원국들의 국제적 · 국내적 노력[67]에 힘입어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본격 재개되어 제네바에서의 다자협상이 2007년 말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다.

2)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우리의 대응

(1) 농업

2007년 초 DDA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농업협상이 미국, EC, 브라질 및 인도가 주도하는 G-4 그룹 협상과 제네바에서의 다자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G-4 그룹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간주되던 미국의 보조금 총액과 EC 등 수입국의 시장개방 수준, 즉 관세 감축률과 저율관세물량 확대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하지만 2007년 6월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G-4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

67) 특히, 지난 50년간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DDA 협상 일시 중단이 다자무역자유화를 통한 선진 통상국가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APEC DDA 정상 특별성명 채택을 주도하는 등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국내적 · 국제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해 G-4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G-4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으나 제네바에서의 다자협상은 계속 진행되어, 팰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2007년 7월, 그동안 제네바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수준 등 농업 협상 전 분야에 걸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68) 을 포함하는 의장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게 회람시켰다.

이 초안에서 의장은 농산물을 관세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 중 최상위 구간은 선진국 66~73%, 개도국 44~49%의 감축률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관세감축률을 적용하지 않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69) 을 전체 품목의 4~6% 이내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미국의 무역왜곡적인 보조금 총액을 130~165억불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개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품목(special product)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8%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10~20% 감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언급하였다.

2007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의장 초안을 기초로 하여 제네바에서 다자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의장이 수정안을 제출할 때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룹별 협의와 그룹간 협의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쟁점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결국 의장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협상은 2008년으로 연장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입국 그룹인 G-1070) 과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같은 입장을 지닌 G-3371)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네바에서의 다자협상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특별품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와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G-33 그룹의 공동입장을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해 왔다.

68) 세부원칙(modalities)이란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공식, 보조금감축공식 등을 포함하는 양허표 작성 원칙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각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양허표)를 작성하게 된다.

69)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은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를 다른 품목보다 적게 감축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품목이며,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은 개도국의 식량안보, 생계안보 및 농촌 개발을 위해 민감품목보다 더 특별한 대우 부여 방안을 협의 중인 품목이다.

70) G-10은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농산물 수입국 그룹이다.

71) G-33은 우리나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 공조 그룹이다.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재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5차례 개최되어 관세감축공식[7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미양허 품목 등 핵심 3대 이슈와 비관세장벽(NTB), 분야별 무세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7년 7월에 스티븐슨(Don Stephenson)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이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회원국간 협상이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 초안에서 의장은 비농산물에 대해 선진국은 8~9%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9~23% 이하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관세 감축 수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대립이 극명하게 표출되어 이러한 입장 차를 좁히는 데 논의가 집중되었다.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를 요청하는 개도국들과 이에 반대하는 선진국들의 입장 차도 지속되었다.

2007년 하반기에 개최된 3차례의 회의에서도 관세감축 수준 및 개도국 특별대우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계속되어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전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비농산물 분야는 농업 분야보다 품목 수가 많고 교역규모도 크며, 개방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세적인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상 진전을 위해 유사 입장 그룹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왔다.

(3) 서비스

2007년에 서비스 협상은 복수적 요청 및 양허 협상[73] 2차례(4월, 9월)를 포함하여 총 5차례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총 21개 복수적 요청 및 양허 협상그룹을 구성하

72) 관세감축공식 관련,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

$$t_1 = \frac{A \times t_0}{A + t_0}$$ A: 계수, t_0 = 인하 전 관세율, t_1 = 인하 후 관세율

관세감축공식의 계수(A)는 관세 상한 기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식의 계수가 10일 경우, 비농산물 품목의 관세율은 10%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에 각각 다른 계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계수의 수준 즉, 관세감축 수준에 대해 미국·EC 등 선진국과 인도·브라질 등 개도국간 입장이 대립 중이다.

73) 복수적 요청 및 양허 협상은 각 서비스 분야별로 관심이 높은 복수의 국가들간 협상으로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이들 국가들로부터 시장개방 요청을 받는 국가들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들로부터 시장 개방 요청을 받게 될 경우, 일대일 양자협상에 비해 양허요청 대상국이 시장개방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효과가 있어 기존 양자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였으며, 우리나라는 해운, 통신, 금융 등 10개 분야에서 양허요청국으로, 법률, 시청각, 항공운송 등 9개 분야에서 양허요청 대상국으로 참여하였다. 각 회원국은 2005년 제출한 수정양허안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양자간, 복수국간 협상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서비스 협상에서는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과 함께 각국의 서비스 관련 국내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자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내규제 규범 제정 협상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회원국들은 2007년 4월 회람된 의장 문안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선도 산업이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통신, 금융, 유통, 건설, 해운의 5대 인프라서비스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동 분야에 대한 각국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여타 협상 분야

여타 협상 분야로는 규범, 지식재산권, 개발 · 이행, 환경, 무역원활화 등이 있다. 규범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반덤핑 프렌즈 그룹[74]을 형성하여 반덤핑 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7년 11월 30일 바예스(Guillermo Valles-Galmes) 규범협상의장이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협정(수산보조금 분야 포함) 개정 의장초안을 작성하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킨 이후, 회원국들은 같은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덤핑 협정 개정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지닌 반덤핑 프렌즈 그룹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제도, 그리고 지식재산권 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간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2월, 6월 및 10월 TRIPS 이사회 정례회의 및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특정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하는

74)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우리나라, 일본, 칠레, 홍콩, 브라질,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코스타리카,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로 구성되는 DDA 규범협상 반덤핑 분야 논의의 핵심 공조 그룹이다.

경우, 생산지를 알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EC 등 구대륙 국가는 기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특별보호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를 구속적인 다자등록시스템을 통해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 호주 등 신대륙은 이에 반대함으로써 구대륙 국가와 신대륙 국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TRIPS와 CBD와의 관계에 관한 협상에서도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CBD 협정 이행을 위해 TRIPS 협정 개정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협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선진국 입장이 대립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개발·이행 분야에서는 개도국이 제출한 총 88개의 협정별 제안을 중심으로 하여 WTO 협정상의 개도국 우대 조항의 내용과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도국 우대 협상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DDA 협상 내 주요 분야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환경 협상에서는 2007년 총 6차례의 특별회의 및 3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① 다자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상의 특정 무역의무(STO: Specific Trade Obligation)와 WTO 규범간의 관계, ②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 및 옵저버 지위, ③ 환경상품 자유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MEA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 제안서를 기초로 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 및 옵저버 지위에 대해서는 의장이 제시한 의제 제안서(elements draft)를 기초로 논의가 계속되었다. 환경 상품 자유화 문제에 있어서도 리스트 접근법에 대한 선진국·개도국간 입장대립이 계속되어 회원국들이 기존에 제시했던 여러 접근법을 조합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 8, 10조의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 수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과 함께 콜로라도 그룹[75] 을 형성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한 해 동안 8회에 걸친 무역원활화 협상에 참석하면서 그간 논의 결과 반영을 위해 우리 제안서 중 단일 서류접수 창구, 통관시간, 위험관리 제안서의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타국 제안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그간 협상의 핵심 이슈가 되어왔던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

75) 콜로라도 그룹이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 과정에서 결성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칠레, 홍콩,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모로코 등으로 구성된다.

3) 우리의 활동성과

2007년 초 DDA 협상 재개와 더불어 우리는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양자 · 다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고위 관료 및 각료급 양자회담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협상 전반에 걸친 균형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핵심이익 확보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APEC 정상회담에서 DDA 특별성명 채택에 기여하는 등 다자무대에서도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또한, 우리는 분야별 협상에서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입장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농업 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및 개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규범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 구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주장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공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더하여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집단과의 협의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내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선진 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들의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규범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세계화 연구의 중추적 기구로서 금융, 무역, 환경, 사회복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화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OECD를 통한 제도적 선진화

2007년은 OECD를 활용한 우리나라 제도의 선진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 OECD는 2007년 3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리의 규제정책과 제도가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로 전환되고, 규제절차의 간소화 등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OECD는 지난 1996년 가입이래 지속하여 왔던 우리나라 노동법 모니터링의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고 공식 인정하였다.

▲ OECD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방안 모색

한편, OECD 한국경제 검토회의가 2007년 6월 개최되어 우리 경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연 4.3%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 회의는 한국의 구조적인 성장 저해 요인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 OECD 국제경제규범 형성 과정에의 참여 확대

우리나라는 OECD 중견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OECD 모범사례를 국내에 소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이제는 OECD의 국제경제규범 형성과 정책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2007년 5월 15~16일간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는 '성장과 형평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FTA 추진경험을 소개하여 세계화 시대에서 성장과 형평 문제를 풀어나갈 정책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R&D 정책,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등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 사례를 설명하였다.

OECD는 뇌물방지협약 서명 10주년을 맞이하여 협약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동 기념행사를 2007년 11월 로마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계기에 우리의 협약 이행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협약체계가 한층 실효성을 갖도록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2007년 11월 28~29일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OECD-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각료회의에 참가하여 MENA 지역의 공공행정 발전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OECD와 비회원국간 협력사업에도 우리의 기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기술적 차원의 OECD 내부운영과 조직 문제에 대하여서도 우리나라의 참여를 제고하였다. OECD의 미래를 설정하는 회원국 확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2007년 11월 OECD 이사회에서 신규 5개국의 가입심사 로드맵 채택에 기여하였으며, 12월에는 우리나라가 감사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임되었다.

▲ OECD에 대한 국내기반 확대

2007년은 우리 국민의 OECD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한 해이기도 하였다. OECD 선진 정책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OECD 웹사이트(OLIS) 워크숍에는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으로부터 많은 참여가 있었다. 11월, 12월 서울과 OECD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파리에서 각각 개최된 OECD 채용정책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각계 전문 인력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OECD 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5절 통상투자진흥 외교

1.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우리 경제에 세계일류 기업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며, 국내 생산·고용·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 2005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 11%, 고용 7%, 수출 14%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각국의 GDP 대비 FDI 잔액 누계는 세계 평균이 24.8%이고, 선진국 평균은 24.2%인데 비해 우리는 8.0%로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FDI 유치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62~ '97누계	'98~ '02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누계
신고액	24,670	12,008	6,471	12,792	11,565	11,240	10,509	137,288
도착액	16,387	7,090	5,116	9,274	9,606	9,075	7,684	92,596
순유입액	14,128	6,297	4,384	8,980	7,050	4,950	-	70,974

(출처 : 산업자원부)

반면, FDI를 통한 경제성장의 모범 사례인 아일랜드[76]의 성공요인은 대규모 시장에의 접근성, 안정적 노사관계, 영어를 사용하는 숙련된 노동력, 낮은 법인세, 개방과 관용의 문화,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DI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반(反)외자 정서의 해소, 획기적 규제 개혁, 세율 인하 및 인센티브 확대,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를 중심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도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76)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1988년 1만불 대에서 1996년 2만불 대, 2006년 5만불 대로 급성장하였다. 1997~2006년간 누적 FDI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555억불인데 비해, 아일랜드는 885억불로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동참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과 국내 제도 및 경영 환경 해외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

■ 재외공관의 주요 FDI 유치 성공 사례

▶ 주샌프란시스코(총) : AMB Property사를 인천 자유무역지대에 6.6 헥타르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에 투자토록 하는 데 성공

▶ 주영국(대) : SAFC사와 경기도간 MOU 체결(2007.11) 성사
현재 2천만불 규모의 반도체 코팅생산공장 건립을 추진중

▶ 주말레이시아(대) : Berjaya Group과 제주 JDC간 MOU 체결 성사
제주도 관광분야에 6억불 규모의 외자 유치 성공(2007.10 착공)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FTA 및 투자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재외공관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된 국내 제도 및 영업 환경을 적극 홍보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2.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외교통상부는 이미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과 외국 정부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7년 2월, 해외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이 확정 · 발표된 후,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상 · 투자진흥종합지원반' 의 운영을 강화하여 재외공관-현지진출기업-주재국 정부간의 삼각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소하거나 해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주요 재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변호사 고용 또는 자문계약이 어려운 중소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서비스'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외 진출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신흥 유망시장 및 틈새 시장의 개척,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진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영업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77] 이를 토대로 업무협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UN 조달시장 설명회'를 민관 합동으로 2차례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도모를 위한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입찰 정보, 재외공관이 보고하는 주재국의 경제·통상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경제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요 경제단체들과 민관합동정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외교통상부의 주요 경제·통상 정책을 설명하고 각 경제단체들의 외교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동 회의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경제·통상 분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왔다. 이와 같이 외교통상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업체의 의욕만으로는 시장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농식품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4월 농림부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전 재외공관을 우리 농식품의 수출 전진기지로 삼음으로써,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에는 7개 공관에서 문화와 연계한 농식품 해외진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78]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 수출선 다변화를 돕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98년부터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경제단체, 16개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통상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에 파견하고 있다.

77) 2004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와 각각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2007년 7월 18일에는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78) 2007년 4월 26일 체결된 업무협력약정의 후속조치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로스앤젤레스, 상하이, 칭따오 등 7개 재외공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실적

(단위 : 건수, %)

구 분	해외바이어 연결 통한 수출알선	애로사항 해결지원	수주지원	사이버기업 서비스 답변율
2006년 총계	3,251	3,617	2,454	84%
2007년 총계	4,965	2,341	2,438	85%

이러한 민관 협력체제하에, 2007년에는 뉴욕한국상품전시상담회 및 북경 하이테크 등 해외 유수 전시회 및 박람회에 우리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총 11차례의 민관 합동 사절단 파견 사업을 지원하였다.79)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 결과로, 중소기업 수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잠재적 수출유망 분야의 전략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4개 전략시장에 45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3. 경제 · 통상 정보 제공

외교통상부는 경제 · 통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적극 제공해오고 있다. 모든 재외공관이 보고한 각국의 개발 프로젝트, 정부조달 및 입찰정보 등을 국내 관련부처와 경제단체, 기업 등에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전달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최근 시장정보란 및 해외입찰정보란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각종 경제통상, 산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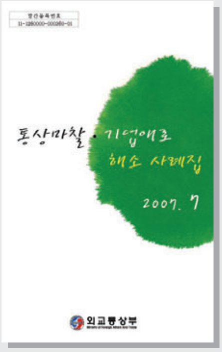
또한, 이미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2001년 12월부터 전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란을 개설하여 기업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고객지향형 1:1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보다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어 정보, 상품산업 정보 분야의 질문은 KOTRA 무역관이 처리하고, 재외공관은 기업애로사항, 경제 · 통상 제도, 법률규정, 시장정보 분야의 문의사항을 담당하고 있다.80)

79) 통상투자사절단은 북미, 유럽 등 전통적인 시장 이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거대시장,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0여개국에 파견되었다.
80) 2007년 한 해 동안 총 2,670건의 문의가 접수되었으며, 평균 답변율은 85%에 달한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하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통상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분석한 「외국의 통상환경」 개정 · 증보판을 매년 발간하여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81] 2007년 발간한 「통상마찰 ·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은 50개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은 다양한 유형의 통상마찰과 애로사항 관련 114건의 사례를 수록, 해외진출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담고 있어 기업들이 해외진출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감안, 베트남 경제와 외국인투자환경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 및 건설관련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한 「베트남 부동산 · 건설 시장 진출가이드」를 2007년 7월 발간하였으며,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중남미 및 동남아 6개국의 바이오 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 및 법 · 제도, 국별 진출시 장애요인 및 유의사항, 국별 투자진출 방법 등에 관한 「바이오에너지 시장 진출가이드」도 발간하였다.

2007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통상마찰 ·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베트남 부동산 · 건설시장 진출가이드

바이오에너지 시장 진출가이드

81) 2007년판 외국의 통상환경은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새로이 포함하여 총 87개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1)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외교통상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총괄부처로서,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 계획의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유치지원본부' 를 2006년 7월 28일 설치하였다. 본부장으로는 제2차관을 선임하였고 관련 국장(8명) 및 과장(6명)들이 이에 참여하여, 주요 인사 접촉을 통한 주요 현안, 관심 사항 및 요구 사항, 주재국 반응, 경쟁국 유치 활동 파악과 여수세계박람회 홍보 임무 등을 도맡았다. 외교통상부는 동 본부를 중심으로 해외고위인사 방한, 경제공동위, 정책협의회 등 계기별 유치 교섭 활동과 주한 외교단 설명회 개최, 그리고 여수박람회 관련 국내외 행사를 지원하였다.

2007년 7월 초부터 유치지원본부 대책반(Task Force Team, 이하 T/F)을 상설화하여, 유치교섭 업무 총괄 및 지지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10월 초부터 총회가 열리는 11월까지는 상기 T/F를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유치상황실로 격상시키고, 일일 지지 동향 점검과 마무리 유치 교섭 독려에 나섰다.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des International Expositions) 회원국 대표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및 벨기에의 재외공관에서도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전담 T/F를 구성, 회원국 대표 교섭 및 경쟁국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주프랑스대사관은 BIE 전담 T/F를 설치하여 유치 활동의 중심축 중 하나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주요 유치 지원 활동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교섭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차관이 직접 재외공관장의 적극적인 교섭을 독려하고, 재외공관에 교섭활동 결과를 수시 및 정례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회원국 주재 재외공관장 및 담당관들간 지역별·외교 사안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관장 및 담당관 전략회의를 지역별·사안별로 개최하였다. 또한 유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주요 인사 교류, 국제회의 개최 등 주요 회담 및 국내외 국제행사 개최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반드시 회의 의제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외교통상부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52개국 대상의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6년 11월 한·아프리카 포럼, 2007년 5월 ASEM

외교장관회의, 2007년 9월 APEC, UN총회 참석과 유럽 4국 방문 및 유럽지역과 아중동지역 공관장 회의 주재 등 각종 국제행사 및 해외순방을 계기로 활발한 유치 교섭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지지 확보가 가능한 30여개 BIE 회원국에는 요구사항의 신속하고 성의있는 처리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KOICA 무상원조 활동 및 국제교류재단 협력사업을 유치사업과 연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활용하였고, 해외문화공연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홍보하였다.

3) 여수 유치 확정

2007년 11월 27일 제14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40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박람회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여수 유치가 확정되었다.

· 1차 투표 : 한국 68, 모로코 59, 폴란드 13
· 2차 투표 : 한국 77, 모로코 63

여수세계박람회 대표단 귀국(2007.11.28, 인천공항)

유치전 승리 요인으로는 민관 합동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전개, 민간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총동원, 여수 박람회 주제의 적절성 및 시의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강한 국력 등을 들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선제적 ·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 경쟁후보가 없는 중남미지역 특히 카리브연안 12개국의 지지를 미리 확보하고, 시의 적절한 각료급 유치사절단 파견 등 본부와 재외공관을 통한 총력 유치 교섭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외교전에서의 승리가 여수 유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된다.

4) 여수세계박람회의 기대 효과

여수세계박람회는 10조원의 생산유발, 4조원의 부가가치 및 9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여수 일대를 관광 · 레저항만으로 개발하고 향후 해양산업 및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적인 측면에서 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등 환경 및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여수 프로젝트' 와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여수선언' 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개요

■ 명칭 :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 단문 : Expo 2012 Yeosu Korea

■ 기간 : 2010년 5월 12일 ~ 8월 12일(3개월)

– 여수시 신항지역에 국가관(57동), 주제관(2동), 기업관(6동) 및 이벤트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전시구역(25만㎢)을 배치
– 기타 관람객 주차장, 종사자 숙박단지 등으로 지원구역(116만㎢)을 배치

※ 사업비(추정) : 1조 6,694억원(공공 4,298억원, 민간 4,748억원, 조직위 7,768억원)
※ 참가국(예상) : 80개국, 10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 관람객(예상) : 약 795만명(내국인 752만명, 외국인 43만명)

■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풍부한 자원 보전과 미래지향적 활동"
(The Living Ocean and Coast :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 하위주제
· Coast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Key Word: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 Creative Maritime Activities
(Key Word: 바다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정신적 · 지적 교감의 성과와 미래 바다와 인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
· New Resource Technology
(Key Word: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술개발)

■ 박람회 성격 :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hibitions)[82)]

82) 엑스포는 BIE의 공인여부에 따라 크게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구별되며, 전자는 다시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hibitions)'와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hibitions)'의 2종류로 구분된다. 등록 엑스포는 대규모 종합박람회로 주제는 인류활동의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달성된 진보를 대상으로 하며, 인정 엑스포는 중규모 전문박람회로 인류활동 중 특정 부분을 주제로 선정, 개최된다.